환 경 부 보도자료		•		
□ '05.6. 배포 □ 사진 없음 □ 총 3 쪽	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	유제철 과 장 김정호 사무관	전화 (메일)	02-2110-7953 baikal@me.go.kr
화학물질 불법수입, 용납 못해 '				
□ 환경부는 화학물질 <b>수입업체가 스스로 과거의 위법행위를 신고</b> 토록 하여 지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되,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<b>위법행위를 감춘 업체</b> 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<b>엄히 처벌</b> 하기로 하였다				
□ 법무부와 공동으로 <b>'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</b> '를 시행하고 있는 환경부는 우선 화학물질 수입업체가 동제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.				
□ 자진신고제란,				
○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을 수입한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나,				
	3 100	1 (		, . 45 , 49 )

○ '02.4.1~'05.3.31 기간 중에 이를 위반한 업체가 '05.4.1~9.30 내에 자진 해서 관련절차를 이행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환경부와 법무부가 방침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제도이다.

□ 환경부는 자진신고제의 취지가 그동안의 법규위반행위를 바로잡아 일제 정리하는 한편, 내년부터 처벌이 크게 강화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, 자진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,

- '04년에 화학물질을 수입한 기록이 있는 6,035개 업체 모두에 자 진신고제 **안내문**을 **발송**하였고('05.3월),
-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,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, 한국정밀화학공업 진흥회 등 **12개 관련단체를 만나 홈페이지에 제도를 소개**토록 하여 소속 회원사들이 제도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였다('05.11~20)
- 또한 전국의 6천여 수입자를 직접 만나 제도를 이해시키고 자진 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과천청사 대강당과 금강청·전주청·영산강청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('05.5.24~27, 616개 업체 참석)), '05.6.7~10일에는 부산, 경남, 대구, 울산,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.
- 환경부는 설명회에 앞서 자진신고제도와 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**공문도 모든 개별 업체에 발송**하는 등('05.5.16) 제도를 알리는데 열을 쏟고 있다.

- □ 환경부는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와 더불어 수입업체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적발, 남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방법을 통해 간접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제도를 알려 나가고 있다.
  - 5월 12일부터 8개 업체를 점검하여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6개 업체를 적발하여 업계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.
- □ 환경부는 자진신고제가 그동안 일방적인 규제위주의 환경행정관행에서 벗어나 **정부와 업계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**을 통해 **법규의 당초 취지를 달성**하고자 하는 **신선한 발상**이라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였으며,
  -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수입업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신고하지 업체는 「엄정한 법 질서 확립」차원에서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.